

2009년 11월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시위 특징과 우리의 대응 방향

이 규 창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0-44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는 동시에 향후 북한의 태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사이에 이루어진 북한의 해상사격 구역 선포와 해안포 사격 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모습은 향후 북한의 태도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자세를 정립하는 가늠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2009년 11월 이후 북한의 대남 행태와 그 특징

사안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2009년 12월 12~22일 남북한 합동으로 진행된 중국, 베트남 공단 시찰 때 북한은 개성공단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하였고, 2010년 1월 14일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명의로 통일부에 통지문을 발송하여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였다. 개성공단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1월 22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3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반면 2009년 11월 11일 노동신문은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 당국이 화해와 관계개선을 외면하고

대결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북한)’도 단호히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압박하였다. 평양방송은 2009년 11월 16일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의 전도는 남측에 달려 있다고 함으로써 우리 정부 당국을 압박하였고, 동년 11월 18일 우리 통일부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대결 정책을 당장 걷어치우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며 재차 압박하였다. 북한은 압박에 그치지 않았다.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직후인 11월 13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명의로 우리 측에 북한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통지하였는데 여기서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지키기 위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2010년 1월말 해안포사격을 감행하는 도발을 하였다.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 이후 2010년 2월까지의 북한 해상사격구역 선포 및 해안포사격 과정을 보면 북한은 ‘대화제의→위협을 통한 압박→도발’이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도발의 강도를 점차 높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금년 1월 25일과 2월 3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 2곳에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 2월 4일에는 동해와 서해상 5곳에 선포하였다. 그리고 2월 19일에는 동해와 서해상 6곳에 선포하는 등 해상사격구역 범위가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을 감행하였다.

2. 2010년 1월의 해안포 사격과 11월 연평도 포격과의 차이점

1월의 해안포 사격과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1월의 해안포 사격 때도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었는데 이때는 북한의 해안포가 우리측 수역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번 연평도 포격은 우리측 수역을 넘어 우리 영토를 목표로 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금번 연평도 포격은 곡사포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연평도가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어 직사포로 사격하는 경우 해안포가 연평도까지 날아갈 수 없다. 반면 곡사포는 곡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해서 목표물까지 날아갈 수 있다. 북한군이 곡사포로 사격을 했다는 것은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부대 및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조준 사격을 한 고의적인 도발행위라는 것을 말해 주며 이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금번 연평도 포격은 민간인까지 그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구별의 원칙’이라고 해서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은 금지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서해상에서 3차례의 교전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지만 서해상에서 우리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도발행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3. 연평도 포격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의 의도를 김정은 후계구도 안정화 및 내부결속 강화, 김정은 업적 쌓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및 북미간 양자회담의 국면전환,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력화 시도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고 그 나름대로 타당할 수 있다. 다만 이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대남 압박을 통한 경제지원 획득이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실무회담,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남한의 대북 경제 지원 및 경협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연평도 포격의도 중 하나가 남북 대화재개에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하루 만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금강산관광 회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11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일부가 무기 연기한 것에 대해 북한은 남북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대화제외와 비난의 이중적인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도 엿볼 수 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의 북한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향후 당분간은 우리 정부 당국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난 및 위협을 통한 압박과 무력시위 내지는 도발을 하는 이중 정책을 실시하고 압박과 도발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달성의 파트너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의 행위는 비난의 수준을 넘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등 실정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연평도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상황관리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남북대화 재개가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의도 가운데 하나라면, 그래서 대화 제의에 우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비난과 위협을 통해 압박을 하고 도발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 갈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화재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숙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어떻게 달성해 낼 것인지 국론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